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뉴스레터



리더칼럼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김영운

이슈진단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과 해외 인프라 시장 핵심 국가
1년 2개월 만에 다시 발생한 지진, 내진보강공사 확대 필요하다

연구원소식

베트남 건설정보 네트워크 구축
- 연구원 홈페이지 내 "해외정보(베트남)" 메뉴 신설



발간물안내

"건설공사 간접비의 하도급 공동가설비 개선방안" 건설정책리뷰 발간



RICON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회원사와 함께 위기 극복에 노력할 때 ”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김 영 윤



4년의 임기로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으로 취임한지 벌써 3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11대 중앙회장으로 선출해 주신 회원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시작이지만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회원사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임기시작 후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협회 내적으로는 중앙회 및 시·도회 등 회장 이·취임식, 신임회장 상견례를 위한 시·도회 회장 회의와 업종별 협의회 회장 회의, 이사회, 회장단회의 등 개최, 제위원회 구성 등 매우 촉박한 일정이 있었으며,

협회 외적으로는 현안사항인 정부 SOC 예산축소 저지를 위한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단체와 공동 대응, 정세균 국회의장 면담 및 국토위원 방문 등 결코 만만치 않은 대외일정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경제는 3% 성장전망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고유가, 원화강세에 포함 지진까지 겹쳐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정부 SOC예산 감축, 부동산 규제 강화, 금리인상 등으로 우리 전문건설업계를 둘러싼 건설환경도 그리 낙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회원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수주물량 확대와 적정공사비 확보, 하도급불공정 해소, 회원사간 화합을 통해 “산업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존중받는 전문건설”을 만들기 위해 정책발굴과 제도 개선 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회원사 생존을 위한 수주물량 확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SOC예산 감축을 적극 저지하고 민간 투자 사업을 늘릴 뿐 아니라, 주계약자 공동 도급공사와 분리발주공사를 활성화, 소규모 복합공사를 확대하고 무등록 시공 근절 등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또한, “공정과 투명”이라는 새로운 이념이 건설업계에 뿌리내려 제값 주고 제값 받는 건설시장을 만들기 위하여 투명한 하도급 입찰제도 마련, 하도급 간접공사비 계상 법제화, 공공공사 낙찰율 상향조정, 표준품셈 및 표준 시장단가 현실화 등을 추진하여 우리 전문건설업체들이 적정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러한 제도변화와 환경개선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관·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위원회(Committee) 구성을 제안하여 건설산업의 여론을 형성하는 오피니언 리더층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범 건설인이 인정하는 새로운 건설문화를 정립하는데에도 적극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속에서 우리 전문건설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건설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신기술 개발, 전문성 강화 등 경쟁력을 제고해야하며, 우리협회에서도 정보제공, 기술심사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협회와 회원사간, 회원사와 회원사간

단결과 화합을 통하여 모두가 하나되는 전문건설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회원사들과 직접적인 대화로써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도회 회장 회의 및 대의원 간담회 정례화, 회원사 간담회 및 설명회 등을 통하여 “화합의 협회 회장”이 되는 데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인디언 격언에 “혼자 꿈꾸면 영원히 꿈이지만 함께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협회와 회원사가 일치단결하여 하나의 꿈과 희망을 공유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줄 때 비로소 꿈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회원사 여러분들께서도 전문건설업계가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성공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우리 협회에 뜨거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응원과 협조, 신뢰를 바탕으로 저는 앞으로 4년간 전문건설업계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변화와 재도약을 내실 있게 이끌어 내겠습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과 해외 인프라 시장 핵심 국가

조재용 선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부터 7박8일의 일정으로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등에 잇따라 참석하며 다자외교를 진행하였다.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과 아세안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개국 수준으로 격상하고, 5년 간 아세안 교역액을 지금의 중국 수준인 2천억 달러까지 끌어올리는 “신 남방 정책” 구상을 발표하며 아세안 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를 선언하였다. 특히 이번에 대통령이 방문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인구 규모가 크고, 최근 경제가 성장하여,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건설업계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약 2억 6천만 명(세계4위)의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는 중기개발계획(2015년~2019년)에서 7% 성장을 목표로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특히 2018년 8월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에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교통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74조 원 규모의 30대 우선 개발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 1억 명(세계13위)의 인구를 가진 필리핀에서는 두테르테 행정부가 2018년도 국토교통분야 예산을 32.6%를 증가시켰으며, 약 23조원을 도로, 공항, 철도 등의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예정이다.

약 9,600만 명(세계15위)의 인구를 가진 베트남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교통 인프라 개선에 48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베트남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인프라 투자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높으며, 2025년까지 도로, 항만 등 인프라에 약 \$5,000억 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공격적인 투자와 함께 외국 자본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58억 달러 규모로 증가하였다. 특히 2015년 12월 한국-베트남 FTA가 발효된 이후 우리 기업의 투자(2016년 27억 달러, 전체 FDI의 17.1%)가 급증하여, 우리나라는 베트남 최대 투자국가가 되었다. 이렇게 베트남은 우리기업의 집중적인 투자지역으로서 다양한 프로젝트 수주의 기회가 있을 뿐 아니라 ODA 자금을 활용한 인프라 시장도 활발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우리 연구원은 해외 건설의 새로운 시장으로서 베트남에 주목하고, 다양한 자료를 축적·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양국 인사의 교류 및 베트남 건설시장 진출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한국-베트남 건설 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또한 한국경제TV의 한국과 베트남 기업들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K-VINA비즈니스센터의 협력기관으로 활동할 예정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베트남 건설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1년 2개월 만에 다시 발생한 지진, 내진보강공사 확대 필요하다

최 별 하 연구원(cbh729@ricon.re.kr)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포항에서는 대학교 외벽이 무너지고 도로가 갈라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번 지진은 지난해 9월 경주에서 5.8의 지진이 발생하고 약 1년 2개월 만에 다시 발생한 지진으로서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의 사각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의 내진설계 규정의 변화를 살펴보면 1988년에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에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이 규정되었고, 1995년에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 2005년에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이상으로 강화되어 왔으며, 2015년부터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더 나아가 2016년 말 국토교통부는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을 제도화하고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및 모든 신축 주택으로 확대하였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 내진대상 건축물 30만 761동 가운데 내진 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은 30.4%에 불과하고, 7월 기준 전국 내진대상 건축물 273만8172동 중 내진설계가 이뤄진 것은 56만3316동으로 20.6%이다. 지진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른 의무규정은 확대되었지만 실제 지진에 대한 대응구조는 취약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내진설계와 노후 민간, 공공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공사의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선결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지원이다. 공공시설의 경우 행안부가 기재부에 요구한 내진보강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내진 보강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표면적 이유이다. 다만 국

민의 우려를 고려해서라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민간건축물의 경우 2013년부터 '내진설계 보강 대수선 공사'를 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공사비용에 비해 혜택이 너무 미흡한 면이 있어 실효성이 떨어졌다. 감면제도에서 더 나아가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처럼 내진 보강공사를 위한 보조금이 지원된다면 내진 성능 확보 건축물 비율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둘째, 국민의 지진에 대한 인식 전환이다. 지진은 태풍이나 호우 같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자주 겪는 재난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해왔다. 하지만 경주에 이어 다시 발생한 포항 지진을 통해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의 무풍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국민의 지진 안전의식이 높아진 주변의 건축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지 검토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전문적 연구의 필요성이다. 정부가 예산을 책정하고 추후 집행할 때 길라잡이 역할을 할 전문적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저비용·고효율의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 개발 및 실증 연구단'을 주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은 이를 실증화하기 위한 '리모델링 기추진 공법 및 기술분석을 위한 실증사업 연구'를 통해 내진설계 등이 반영된 연구를 선구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진의 빈도와 진도가 높아지는 만큼 연속성 있는 후행연구와 연구의 확대가 필요한 가운데, 우리 연구원의 내진 보강공사를 위한 전문적 연구가 국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베트남 건설정보 네트워크 구축

- 연구원 홈페이지 內 "해외정보(베트남)" 메뉴 신설

우리 연구원은 해외건설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원 홈페이지 내 "해외정보" 메뉴를 신설하여, 베트남과의 건설협력을 위한 허브기관으로서 베트남 건설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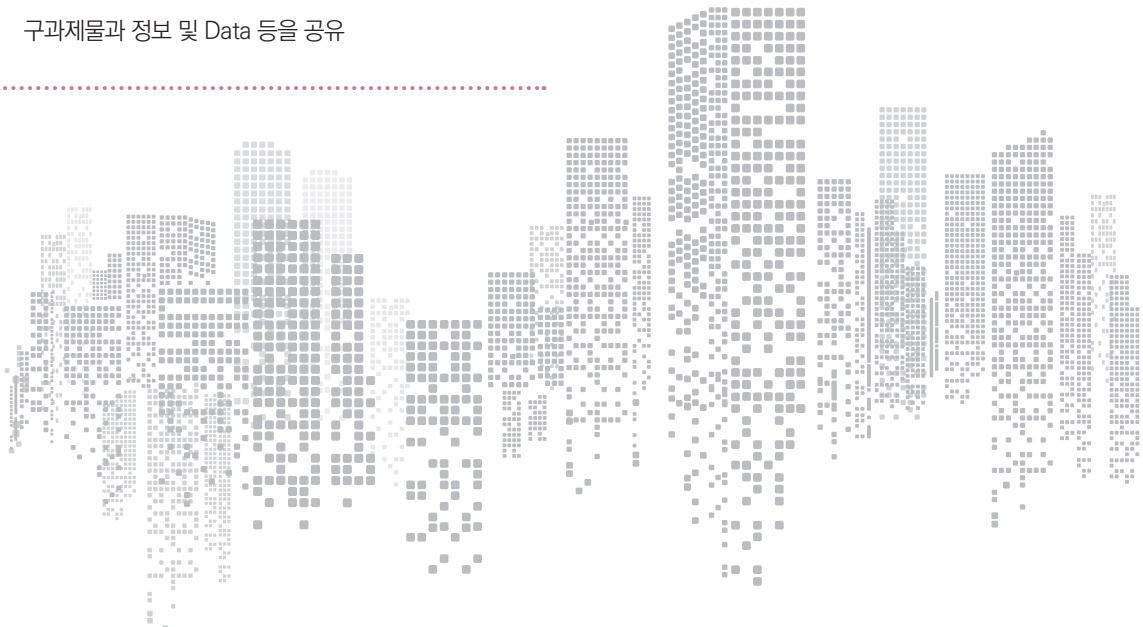
신설된 "해외정보"는 베트남 관련 동향 및 이슈, 관련 규정 및 법·제도, 건설기반 네트워크와 베트남 건설 관련 자료 등 총 4개 게시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① 베트남 관련 동향 및 이슈
:국내외 관계, 산업계, 학계 그리고 방송, 신문 및 인터넷 등에서 언급된 베트남과 관련된 주요 동향 및 이슈 등을 제공
- ② 베트남 관련 규정, 법 및 제도
:국내 건설기업들의 성공적인 베트남 진출을 위해 필요한 규정, 제도 및 법 등과 관련된 지식, 정보 및 Data 등을 제공
- ③ 베트남 건설 기반 네트워크
: 베트남 현지의 건설 관련 조직(정부, 공공 및 민간 조직 등)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
- ④ 베트남 건설 관련 자료
: 건설관련 학계 및 산업계에서 수행한 베트남 건설관련 연구과제물과 정보 및 Data 등을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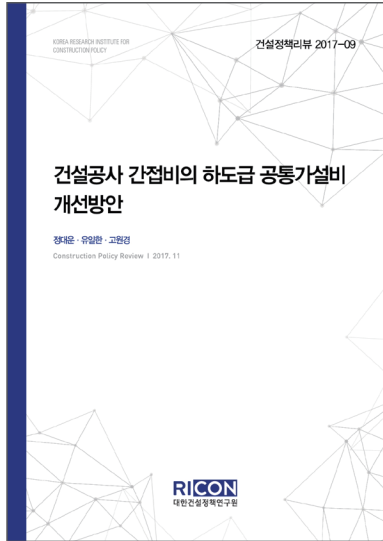
한편, 우리 연구원은 한국과 베트남 양국 기업들의 상호 상대국 사업진출과 투자에 대한 정보, 컨설팅, 전문교육, 일자리·사업 매칭을 돕기 위해 한국경제TV에서 설립한 한경 미디어 그룹 내 민간기구인 "K-VINA 비즈센터"와 협력기관을 맺어 함께 활동할 예정이다.

- 동 센터는 경제단체 및 연구원, 정부 산하기관들의 거시적이고 분절적인 베트남 사업 정보를 한데 모아 기업들이 원하는 맞춤형 정보로 재가공 분석한 뒤, 원스톱으로 사업진출 및 투자 안내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개인 사업가들을 대상으로 베트남 진출과 투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 전문교육을 먼저 시행하고, 향후 베트남 기관 및 기업들의 한국진출을 위한 정보제공과 투자안내, 일자리 및 사업 매칭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 연구원은 앞으로도 베트남과의 건설협력을 위한 허브기관으로서 베트남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건설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한국 건설업체의 베트남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건설공사 간접비의 하도급 공통가설비 개선방안” 건설정책리뷰 발간



우리 연구원은 하도급 공통가설비의 부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건설산업기본법」은 불공정한 도급계약의 원칙을 명시하고 하수급인의 임시 시설물 설치 또는 비용에 대한 전가를 부당특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가설공사 표준시방서’를 통해 건설공사의 가설공사 중 여러 공종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는 원도급자가 설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원도급자가 현장사무실 등 공통가설 시설물을 설치하여 제공하지 않고 하도급자에 의하여 설치되고 해당 설치비용 또한 제대로 지불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동 보고서에서 건설공사 공통가설비의 개념을 정립하고, 사용현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후 하도급 공통가설비의 부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하도급 공통가설비 관련 주요 이슈를 진단하기 위하여 실무자 인터뷰 조사를 통해 공통가설비 부담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업계 전반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하도급 공사내역서 분석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전문건설업체 473개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하도급사가 공통가설 시설물을 설치·운영한다는 답변이 40%, 공사마다 다르게 적용된다는 답변도 30%였다. 공통가설비를 직접 지출하는 이유로는 관례적으로 부담한다는 답변이 43%, 현장설명서의 기재로 인해 부담한다는 답변이 34%로 조사되었다.

이를 토대로 동 보고서에서는 제도 및 교육·홍보분야로 개선방안을 구분하고 단기 및 중장기의 세부방안을 제시하였다.

- 제도분야의 개선방안에서는 단기적으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47조 및 ‘부당특약 심사지침’의 ‘부당특약 예시’에 대한 개정안과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4조의8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교육·홍보분야에서는 건설업체 관리자 및 기술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기술교육원과 대한전문건설협회의 건설교육센터, 그리고 종합건설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공통가설 시설물의 설치와 공통가설비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발주자 및 원하도급자가 공통가설 시설물의 설치주체를 명확히 인식하여 부당한 공통가설비 전가를 방지하고 적절한 공통가설비가 지급되어 적기 적소에 공통가설 시설물의 설치가 이루어져 공사현장의 업무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사전 협의 없는 무단 인용, 도용, 재가공, 전재 및 복제, 배포 행위를 일절 금합니다.